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 -2019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송미령·성주인·김광선·정도채·한이철

요 약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귀농·귀촌 인구 감소

- 2019년 귀농·귀촌 가구는 329,102호, 귀농·귀촌 인구는 총 460,645명으로 나타남. 2017년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상회한 이후 2018년에 이어 감소 추세를 보임. 귀농인 연령은 전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귀촌가구의 연령이 낮아진 것은 중요한 특징임.
- 귀농가구는 11,442호로 전년보다 539호(4.5%) 감소하였고, 귀농가구원은 16,181명으로 전년보다 1,675명(9.4%) 감소함.
- 귀촌가구는 317,660호로 전년보다 10,683호(3.3%) 감소하였고, 귀촌인은 444,464명으로 전년보다 28,010명(5.9%) 감소함. 전 연령대에서 귀촌인 수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20대 이하 귀촌인의 비중은 증가함.

귀농·귀촌 인구이동 특징 분석

- 귀농인들은 상대적으로 농업 여건이 양호한 전통적 농업지역 중심으로, 귀촌인들은 주거 및 생활환경의 편리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보다 본격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음.
- 수도권 지자체보다는 전통적 농업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연간 귀농가구 수가 확연히 많음. 다만, 그동안 귀농 유입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 중 상당수에서 귀농 자체의 양적 증가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일부 과소화 지역에서는 귀촌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됨.
- 귀촌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최근 들어 귀촌 유입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 곳들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소화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들이기도 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줌.
- 귀촌가구의 주요 이주 사유는 직업(34.1%), 주택(26.9%), 가족(24.8%)의 순으로 나타나며, 연령별로 이주 사유에 차이가 있음. 전년도보다 건강과 교육 목적 이주가 증가한 점에 주목할 만함.

시사점과 정책 과제

-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새로운 인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여건과 지역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며 지역 단위의 귀농·귀촌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경기 하락과 도시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이 가능함.
- 귀농·귀촌 이외에 도·농 병행 거주인구, 농촌지역 관계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인구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도모가 필요함.

01

개요

2019년 귀농·귀촌 인구이동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

- 농림축산식품부 및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19년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 수는 총 329,102호, 귀농·귀촌 인구는 총 460,645명으로 나타남. 이는 유사한 방식의 조사가 시작된 2012년도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2017년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꽤 감소한 수치이고 2018년과 비교해도 다소 감소한 것임.
- 귀농보다는 귀촌 인구가 두드러지며,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귀농 목적지와 귀촌 목적지의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귀농자의 연령은 전년에 비해 다소 높아졌지만, 20대 이하 젊은 귀촌자의 연령은 확연히 낮아진 것도 중요한 특징임.

귀농·귀촌 인구이동의 요인 분석 필요

- 전통적인 인구이동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이동은 출발지의 압출요인(push factors)과 목적지의 흡입요인(pull factors)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인구 과소화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은 농촌 활성화에 중요성이 큼.
- 왜 귀농·귀촌 인구이동이 감소하였는지를 추정하는 한편, 귀농·귀촌 인구이동 목적지의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음.

2019년에는 가장 활발한 인구이동 연령층의 인구 규모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영향으로 내국인 인구이동 자체가 축소

- 귀농·귀촌 이동이 줄어든 주요 배경으로 국민 전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주가 가장 활발한 젊은층(20·30세대) 인구 규모 자체가 감소한 것을 들 수 있음. 이에 더해 인구 고령화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인구이동률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기도 함.
- 2019년 국내 인구이동 수는 710만 4398명으로 전년 대비 19만 2701명(2.6%) 감소함.
- 2018년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고, 권역별로 유출이 가장 심했던 영남권은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인구 이동량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총 이동인구 수 대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주민등록인구 기준)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농촌으로의 순 유입 인구수는 상당히 감소

- 총 이동인구 중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인구는 745,912명으로 총 이동인구 중 10.5%를 차지함.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731,675명으로 총 이동인구 중 10.3%를 차지함. 농촌으로의 순 유입이 우세한 인구이동 패턴은 전년과 유사한 흐름임을 알 수 있음.
- 총 이동인구 감소 영향으로 농촌으로의 순 유입 인구는 14,237명으로 전년 대비 69.0% 감소함.

〈표 1〉 도농 간 인구이동(2010~2019년)

단위: 명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이동인구	8,226,594	7,755,286	7,378,430	7,154,226	7,297,099	7,104,398
농촌→도시(A)	829,814 10.1%	746,626 9.6%	707,902 9.6%	704,585 9.8%	741,380 10.2%	731,675 10.3%
도시→농촌(B)	926,125 11.3%	828,443 10.7%	822,271 11.1%	821,021 11.5%	786,998 10.8%	745,912 10.5%
농촌으로의 순 유입(B-A)	96,311	81,817	114,369	116,436	45,618	14,237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주민등록전입신고 원자료(각 연도).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현재 농촌 정주 인구의 유지도 중요함. 더불어 2지역 거주 및 관계인구 등 새로운 교류 인구 확대에도 주목할 필요

-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므로 귀농·귀촌 인구이동은 농촌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 있는 단초임.
- 귀농·귀촌 인구이동을 향후에도 지속시키고 귀농·귀촌 인구가 기존 주민과 융화되어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함. 동시에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또한 여전히 중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인구 저성장 및 인구구조상 20·30세대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인구이동량 자체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움. 다만, 도시-농촌 병행 거주 인구, 농촌지역 관계인구¹⁾ 등 다양한 교류 인구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도모가 필요함.

1) 관계인구란 다른 지역에 거주하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인구를 말함. 지역 밖에서 이주한 '정착인구'와 관광 방문객 등 '교류인구'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됨.

02

2019 귀농·귀촌 동향

2.1. 귀농 동향

귀농가구는 11,442호로 전년보다 539호(4.5%) 감소함. 1인 귀농가구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지역별로 귀농가구 수 총량은 경북과 전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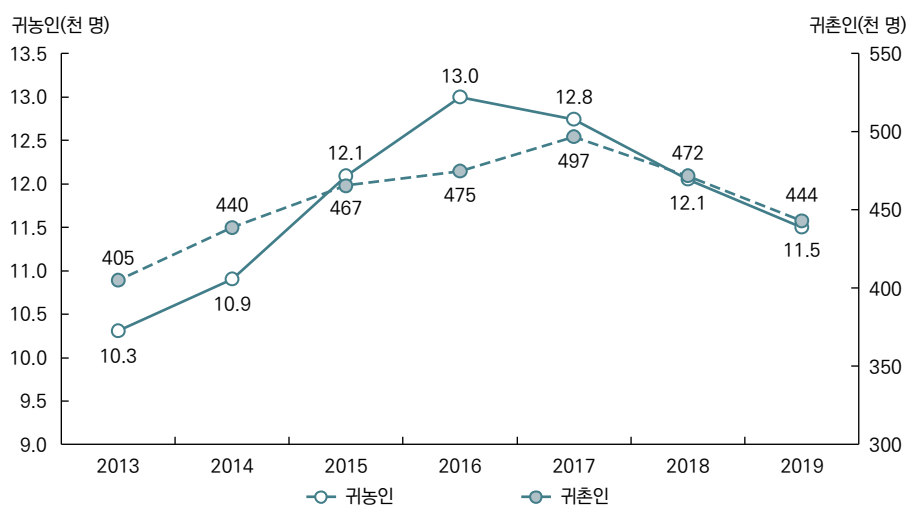
- 1인 귀농가구가 증가하면서 평균 귀농가구원 수는 1.42명으로 전년도보다 0.07명 줄어듦. 1인 귀농가구 비중은 72.4%로 전년보다 3.5% 증가한 데 반해, 다인가구의 비중은 감소함.
- 귀농가구는 시·도별로 경북(18.7%)이 가장 많았으며, 전남(17.6%), 전북(11.5%), 경남(11.5%), 충남(11.0%) 순으로 많았음. 경남, 강원, 충북, 충남에서 귀농가구 수가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함.
-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가구의 재배면적은 평균 0.37ha(3,673㎡)이고, 재배면적이 0.5ha(5,000㎡)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음.
- 귀농가구 중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346가구인데, 꿀벌(43.9%), 한우(34.1%)와 곤충류(7.2%) 등을 많이 사육함.

귀농가구원은 16,181명으로 전년보다 1,675명(9.4%) 감소함. 경기,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던 이들의 비중이 높으며, 30대 이하 비중이 47.1%를 차지함.

- 귀농가구원은 16,181명으로 전년보다 1,675명(9.4%) 감소함. 귀농인은 11,504명으로 전년보다 4.6% 감소하였고, 동반가구원은 4,677명으로 19.4% 감소함. 1인 귀농가구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5.0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짐. 전년 대비 60대 이상의 비중은 증가하고, 40대 이하 비중은 감소함. 연령별 비중은 30대 이하 10.5%, 40대 15.2%, 50대 37.3%, 60대 이상 37.0%으로,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귀농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40.1세로 전년보다 1.1세 늘어남. 50대 이상의 비중은 증가하고 40대 이하 인구 비중은 줄어듦.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이하가 47.1%, 50대가 2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7,956명(69.2%)으로 전년보다 6.8% 감소함. 반면 다른 직업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농인은 3,548명(30.8%)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함.
- 귀농하기 전 거주지는 경기도 전체의 19.8%로 가장 많았고, 서울(16.1%)과 대구(8.4%) 순으로 많았음.
- 귀농인은 전남 고창군, 전남 나주시와 고흥군, 경북 상주시와 의성군 등을 귀농 목적지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이주하였음. 농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귀농인의 이동이 활발함.

〈그림 1〉 귀농·귀촌인 규모 변화(2013~2019년)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2.2. 귀촌 동향

귀촌가구는 317,660호로 전년보다 10,683호(3.3%) 감소함. 전년보다 젊은층 비중이 증가하였고, 경기와 경북의 귀촌가구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귀촌가구의 평균 연령은 44.8세로 전년보다 0.1세 낮아짐. 가구주는 30대가 2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세 이하 가구주 비중만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감소함.
- 귀촌가구는 시·도별로 경기(26.1%)에 가장 많았으며, 경북(12.3%), 경남(11.7%), 충남(10.6%) 순으로 많았음. 증감률로는 강원, 경북, 울산에서만 전년 대비 귀촌가구 수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함.
- 귀농가구와 마찬가지로 귀촌가구도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 1인 귀촌가구 비중이 전년 대비 2.2%p 증가하여 74.1%²⁾에 달하였음.

2) 2019년 인구이동자료에 따르면 이동세대 중 73.5%는 단독세대이동임. 도시(동 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53만 세대 중 79.05%는 단독세대 이동임.

- 귀촌가구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 주택, 가족 등의 순으로 조사됨. 20·30대 청년층은 직업을, 50·60대 장·노년층은 주택 등 주거비용을 이유로 농촌에 이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송미령 외 2019). 청년층은 창업 등 새로운 직업기회 모색을 위해 교육을 마치고 귀농·귀촌하는데 비해 장·노년층은 은퇴시기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적게 들고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의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입 사유에서 귀촌가구의 4.5%는 건강을 이유로 귀촌하였으나, 산촌지역으로 귀촌한 가구는 건강이 1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산촌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이 건강 관련 유인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촌지역의 헬스·휴양·주거 산업 가능성을 보여줌.

귀촌인은 444,464명으로 전년보다 28,010명(5.9%) 감소함. 전 연령대에서 귀촌인 수는 다소 줄었지만, 20대 이하 귀촌인의 비중은 증가함.

-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1.4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짐. 연령별 귀촌인 비중은 20대 이하가 높은 비중(26.9%)을 차지하였으며, 30대 22.8%, 40대 16.4%, 50대 16.8%, 60대 이상 19.1%를 차지함.
- 귀촌 전 거주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순임. 귀촌인 중 강원과 세종에서 거주하던 귀촌인의 비중이 늘어남.
- 귀촌인은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광주시, 대구 달성군, 충남 아산시 등을 귀촌 목적지로 가장 많이 선택하여 이주함.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도시적 편익과 농촌적 장점을 가진 지역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짐.

귀농·귀촌인의 정의

- 귀농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농촌(읍·면 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상 기간 중 농촌(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 및 동반 가구원을 제외한 이동자
- 귀농가구·귀촌가구: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촌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구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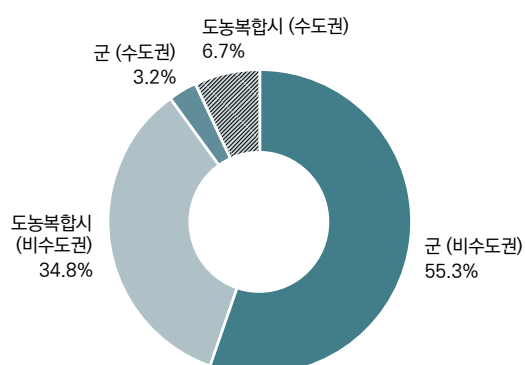
귀농·귀촌 특징 분석

지역별 귀농가구 현황 및 변화 추이

시·군 유형별 귀농가구원 분포 현황

- 최근 어떤 지역으로 귀농가구의 유입이 많았는가를 파악함.
- 2019년 기준 시·군별 귀농가구원 수 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음. 비수도권의 군 지역에 귀농가구원의 55.3%가 유입되었으며, 비수도권의 도농복합시에 34.8%가 유입됨. 비수도권의 도농복합시 및 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음.

〈그림 2〉 지자체 유형별 귀농가구원 구성 비율(2019년)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020). 『2019년 귀농·귀촌인 통계』.

연도별 귀농가구 변화 추이

- 2016년까지 귀농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됨.
- 시·군 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도농복합시에서 가장 감소세가 두드러짐.

〈표 2〉 지자체 유형별 귀농인 및 귀농가구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증감률(%)	
						'15~'17	'17~'19
수도권	1,919	2,506	2,128	1,735	1,597	7.8	-13.2
- 도농복합시	1,302	1,908	1,545	1,243	1,078	13.8	-16.4
- 군	617	598	583	492	519	-2.8	-5.1
비수도권	17,941	18,053	17,502	16,121	14,584	-1.2	-8.7
- 도농복합시	6,884	7,017	6,626	6,093	5,631	-1.8	-7.8
- 군	11,057	11,036	10,876	10,028	8,953	-0.8	-9.3
전 체	19,860	20,559	19,630	17,856	16,181	-0.5	-9.2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2015~2019년 연간 귀농가구 수 기준 상·하위 시·군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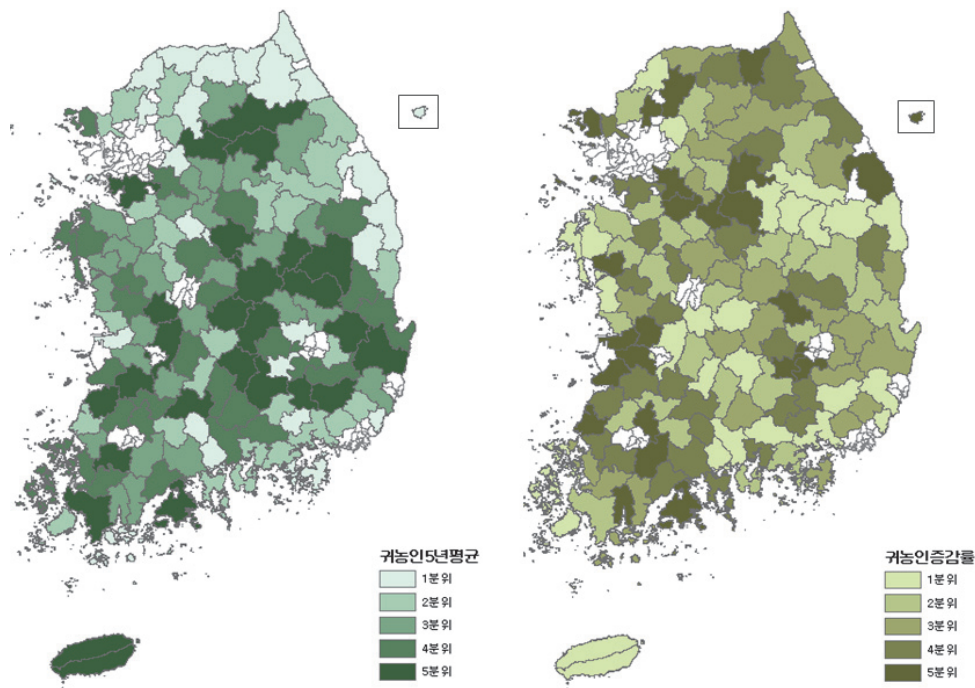
- 수도권 지자체보다는 전통적 농업지역에 위치한 시·군에 연간 귀농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어촌지역, 접경지역,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는 연도별 귀농가구 유입량이 낮은 경향을 보임.
- 〈그림 3〉에서 귀농가구원 규모가 큰 시·군들 중 상당수가 최근 5년간 귀농가구원 증가율이 감소 또는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귀농인의 총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표 3〉 귀농가구원 수('15~'19년 평균) 상·하위 시·군 목록

구 분	시·군 목록
상위 20개	(경기) 화성시, 양평군, (강원) 홍천군, (전북)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전남) 나주시, 고흥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경남)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하위 20개	(부산) 기장군, (인천) 옹진군, (경기) 양주시, (강원) 삼척시,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증평군, 진천군, (충남) 계룡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양군, 고령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통영시, 거제시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를 저자 가공.

〈그림 3〉 귀농가구원 수 및 연평균 증감률 추이 기준 상·하위 시·군 분포(’15~’19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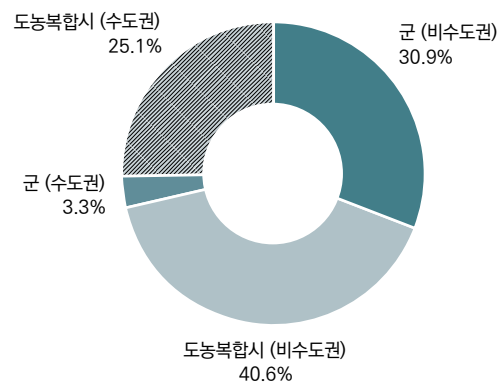


주: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를 저자 가공.

시·군 유형별 귀촌인(가구원 포함) 분포 현황

- 2019년 시·군별 귀촌인 분포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도농복합시 및 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나, 귀농가구와 비교해서는 수도권 지자체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지자체 유형별 귀촌가구원 구성 비율(2019년)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020). 『2019년 귀농·귀촌인 통계』.

연도별 귀촌인 및 귀촌가구원 변화 추이

- 귀촌인 및 귀촌가구원은 귀농·귀촌 인구이동이 정점을 이루었던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증가하다 2018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수도권의 도농복합시는 2017년까지 가장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의 감소폭도 비교적 낮음.
- 2017년까지 증가하던 수도권의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은 최근 가장 감소세가 두드러짐.

〈표 4〉 지자체 유형별 귀촌인 및 귀촌가구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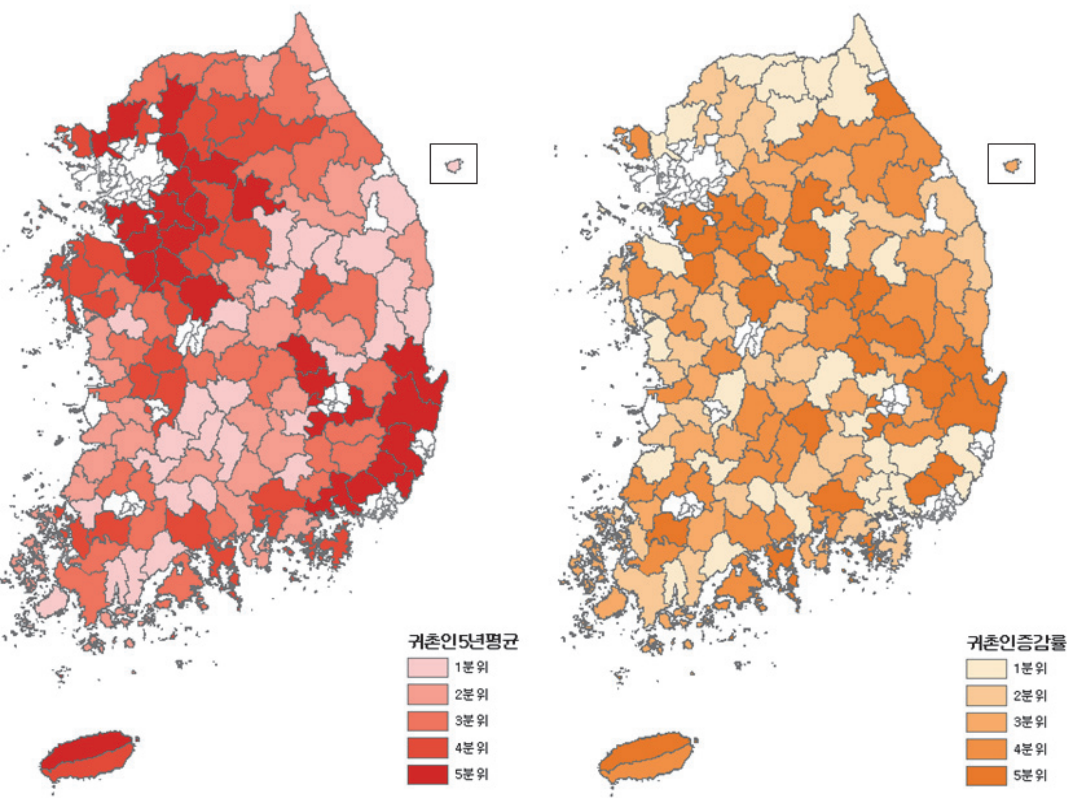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증감률(%)	
						'15~'17	'17~'19
수도권	135,490	139,975	147,336	137,263	126,405	4.3	-7.4
- 도농복합시	119,182	123,314	129,800	121,434	111,570	4.4	-7.3
- 군	16,308	16,661	17,536	15,829	14,835	3.7	-8.0
비수도권	331,288	335,514	349,851	335,211	318,059	2.8	-4.7
- 도농복합시	169,334	174,324	189,577	186,924	180,577	5.8	-2.4
- 군	161,954	161,190	160,274	148,287	137,482	-0.5	-7.4
전 체	466,778	475,489	497,187	472,474	444,464	3.2	-5.4

자료: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2015~2019년 귀촌가구 증감률 기준 상·하위 시·군 특성

- 귀촌인 수 증가량이 큰 지역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방거점도시 지역임.
- 귀촌인 유입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지자체는 대도시 근교 시·군들이 다수 해당되며, 산업개발로 제조업체 입지가 늘어나 주변 농촌 주거환경이 영향을 받게 된 시·군들도 일부 포함됨.
- 다만,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귀촌인의 절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최근 들어 귀촌 유입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 곳들이 있음. 이 지역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소화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들(양양, 평창, 청양, 남원, 영광, 문경, 의성, 거창)이어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줌.

〈그림 5〉 귀촌가구원 수 및 연평균 증감률 추이 기준 상·하위 시군 분포('15~'19년 평균)



〈표 5〉 귀촌인 수 증감률('15~'19년) 상·하위 시군 목록

구 분	시군 목록
상위 20개	(대구) 달성군, (경기)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강원) 원주시, 양양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예천군, (경남) 진주시, 김해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하위 20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충남) 당진시, (전북) 완주군, (경북) 김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주: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각 연도).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를 저자 가공.

귀촌가구의 이주 사유 특징

- 귀촌가구의 주요 이주 사유로는 직업이 가장 높았으며(전체 귀촌가구의 34.1%), 이어서 주택(26.9%), 가족(24.8%)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도와 비교할 때, 직업, 주택, 가족으로 인한 귀촌 건수는 감소한 반면, 건강과 교육을 이유로 귀촌한 가구 수와 비중은 각각 증가함.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 귀농·귀촌 목적지와 이주 사유를 결부하여 보건대, 농촌 공간의 다양한 자원이 재조명되며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농촌 공간 수요가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잠재적인 귀촌인들이 농촌 생활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인구 확보와 2지역 거주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귀촌정책이 필요함.

〈표 6〉 이주 사유별 귀촌가구 변화(2018~2019년)

단위 : 가구, %

구 분		전국	직업	주택	가족	기타	건강	교통	교육
2018	귀촌가구 수	328,343	109,312	93,207	80,097	19,309	13,516	8,178	4,724
	비중	(100.0)	(33.3)	(28.4)	(24.4)	(5.9)	(4.1)	(2.5)	(1.4)
2019	귀촌가구 수	317,660	108,219	85,424	78,837	16,873	14,226	8,632	5,449
	비중	(100.0)	(34.1)	(26.9)	(24.8)	(5.3)	(4.5)	(2.7)	(1.7)
증감	증감수	-10,683	-1,093	-7,783	-1,260	-2,436	710	454	725
	증감률	-3.3	-1.0	-8.4	-1.6	-12.6	5.3	5.6	15.3

* 전입사유 : ① 직업(취업, 사업 등) ② 주택(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③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④ 교육(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⑤ 주거환경(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⑥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⑦ 기타

인구이동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인구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귀농인들은 농업 여건이 양호한 전통적 농업지역 중심으로, 귀촌인들은 주거 및 생활환경의 편리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보다 본격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음.

그동안 귀농 유입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 중 상당수에서 귀농 자체의 양적 증가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일부 과소화 지역에서 귀촌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됨.

04

시사점

귀농·귀촌 인구의 양적 증대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보다 전략적인 귀농·귀촌 정책 필요

최근까지 귀농·귀촌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9년 기준 다소 하락세로 돌아섬

- 2018년도에도 전년 대비 귀농·귀촌인 수가 감소하였으나 당시에는 행정구역의 변화(읍→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019년도의 전년 대비 귀농·귀촌 감소는 2017년 귀농·귀촌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실질적인 감소임.
- 귀농·귀촌 인구의 감소는 가장 이동이 활발한 세대인 20·30세대 인구가 줄어든 탓에 국내 인구이동 수 자체가 감소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부동산 및 산업 이슈 등과 맞물린 국내 경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귀농·귀촌 목적지를 볼 때 귀농·귀촌을 하려는 이들이 합리적 선택을 지향하면서 양적 증가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인구구조 변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교통·통신 발달 등 여건 변화와 맞물려 귀농·귀촌 정책 재점검이 필요함

- 귀농인구의 지역 선택, 귀촌인구의 지역 선택이 보다 합리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귀농인들은 농업 여건이 양호한 전통적 농업지역 중심으로, 귀촌인들은 주거 및 생활환경의 편리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즉,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도 이에 맞추어 합리화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단위의 귀농·귀촌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림 6>과 같이 귀농·귀촌을 위한 지역 선택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괜찮은 주택과 가족과의 삶, 쾌적한 자연·생태, 생계 마련, 안전·치안, 기초생활 인프라, 도시 접근성, 마을 주민과의 친밀성, 자기개발 기회, 보건·의료 인프라 등이 중요한 요소임.
- 이미 귀농·귀촌하여 농촌에 정착한 주민들의 경우 이주 지역 선택 요소에 대해 이주 전에 판단했던 중요성과 이주 후 만족도를 교차하여 분석하면, 정부 및 각 농촌지역이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중점 개선, 유지 강화, 지속 유지, 점진 개선 등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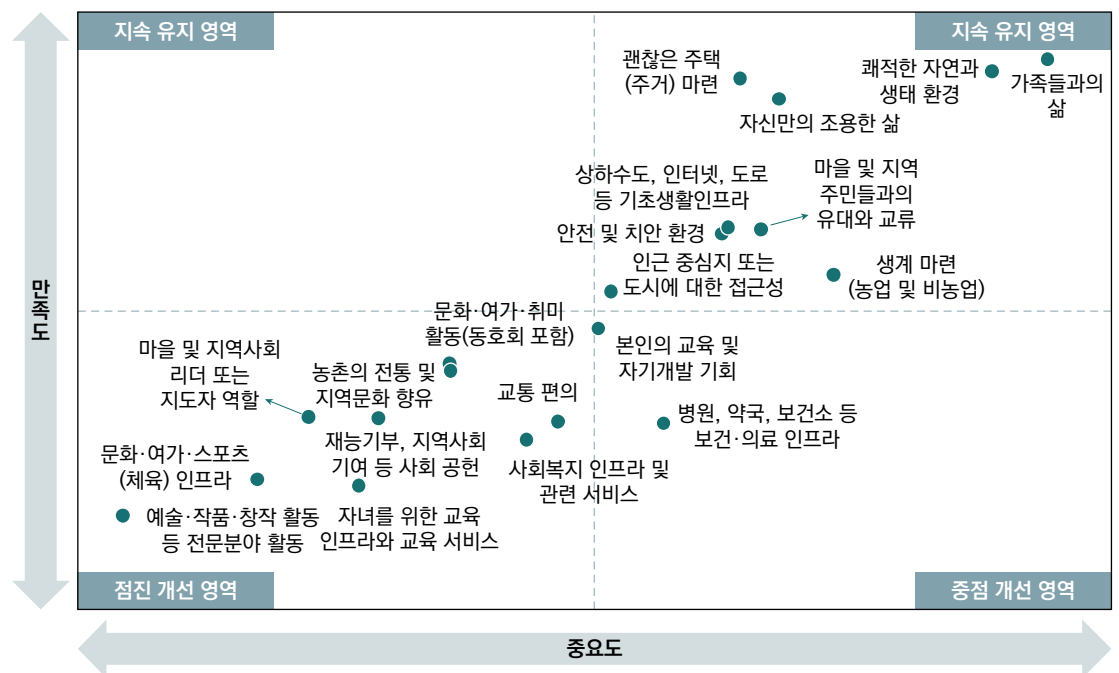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 -2019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 이에 따라 귀농·귀촌 촉진을 위한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이주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여건과 지역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며 지역 단위의 귀농·귀촌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귀농·귀촌은 농업 인력이나 농촌 인구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농촌지역개발 정책과 뗄 수 없는 관계

- <그림 6>와 같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역 요소가 귀농·귀촌의 양과 질을 결정함.
- 결국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의 좋은 지역 만들기’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래야만 농촌을 떠나는 유출인구도 줄일 수 있음.
-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 제고, 합리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환경·경관의 유지 등이 중요함.

<그림 6> 귀농·귀촌 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과 현재의 만족도 IPA 분석



자료: 김광선 외(2019).

전반적인 경제 하락과 도시의 일자리 감소는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 모색 촉진

농촌에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경작지가 있는 도시민들의 경우 경제 하락과 도시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이 가능함.

- 귀농인의 절반 정도가 ‘순수 자경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농촌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귀농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오랫동안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는 도시에서의 일자리 부족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처가 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도시 일자리가 급감한 이탈리아의 “농촌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이러한 측면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귀농·귀촌 인구 감소에도 농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점은 농업 분야의 잠재적 일자리 공급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함.

농촌은 생계를 위한 활동뿐 아니라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 <표 7>은 귀농·귀촌인 중 창의력이 높은 창조계층(creative class)이 과거 도시에서의 경험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보여주고 있음.
- 농업 분야 외에도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의 경우 귀농·귀촌인은 농촌 발전을 위한, 그리고 귀농·귀촌인 본인과 농촌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이들에게 농촌은 생계를 위한 일자리 외에도 자기계발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음.

<표 7>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귀농·귀촌인의 농촌 활동(창조계층의 예)

단위: %

문화예술분야 창조계층		전문지식기술분야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	21.7	농업농촌 기술지원	37.7	교육 및 역량강화	20.3
언론출판홍보	17.4	유기농 등 농업활동	13.2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16.9
지역문화예술활동	17.4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11.3	취업 및 소득 창출	11.9
농촌관광축제활동	13.0	교육 및 역량강화	9.4	공공부문 지원 및 자문	8.5
마을 및 지역개발 참여	8.7	취업 및 소득 창출	5.7	농업농촌 기술지원	8.5
지역복지활동	8.7	가공 및 판매 활동	3.8	투자 및 기업 지원	5.1
가공 및 판매사업	4.3	농업농촌 ICT 기반구축	3.8	가공 및 판매 활동	5.1
유기농 등 농업활동	4.3	지역복지활동	3.8	농촌관광축제활동	5.1
취업 및 소득 창출	4.3	가공 및 판매사업	1.9	유기농 등 농업활동	5.1
		공공부문 지원 및 자문	1.9	귀농귀촌지원활동	3.4
		귀농귀촌지원활동	1.9	지역문화예술활동	3.4
		기타	5.7	지역복지활동	3.4
				교육 및 역량 강화	1.7
				기타	1.7

자료: 김광선 외(2019).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교류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귀농·귀촌 확대 모색

도시-농촌 병행 거주 인구, 농촌지역 관계인구 등 다양한 교류 인구 확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도모

-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53%가 일정 기간은 도시에 거주하고 다른 일정 기간은 농촌에 거주하는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김광선 외 2019). 이는 기존 귀농·귀촌 방식인 농촌으로의 완전 이주를 원하는 도시민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응답 비율임. 도시-농촌 병행 거주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제약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농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특정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방문하는 관계인구 역시 해당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에, (가칭)‘농촌 관계인구 네트워크 구축’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함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광선·김남훈·서형주. 2019.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성주인·김광선·심재현·정도채·서형주. 2019. 『농촌 유토피아』. 도서출판 들녘.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주민등록전입신고 원자료. <<http://mdis.kostat.go.kr>>. 검색일: 2020. 6. 9.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박대식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345	pds8382@krei.re.kr
내 용 문 의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061-820-2351	mrsong@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94호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

-2019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0. 12.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